

主題

2004년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 과제

한국전산원 원장 서삼영

차 례

1. 서론
2. 그동안의 추진실적
3. 2003년도 정보화 추진성과
4. 2004년도 정보화 추진방향
5. 맺음말

1. 서론

인터넷, 핸드폰, 컴퓨터, PDA...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소했던 단어들이었다. 미래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는 꿈같은 기술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핸드폰을 소지하고, 각 가정마다 컴퓨터가 놓여있고, 인터넷을 한 두 번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인터넷은 이제 단순한 정보통신의 수단을 넘어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이 없어서는 안될 사회적 인프라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이러한 정보기술의 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식정보화사회, 신경제로의 성공적 진입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가정보화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동방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만 기억되었던 조그만 아시아 국가 한국이 이제는 인터넷 정책 및 정보화에 있어서 해외각국의 벤치

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이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역동적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 흐름에서 이제 한국이 쫓아갈 검증된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우리의 인프라 수준이 세계 최고임을 강조했던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한국의 정보화는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wired society)'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의사소통, 거래, 사교활동은 물론 정치활동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아바타'라는 또 하나의 자신이 활동하는 새로운 가상공간, 사이버스페이스(cyber space)가 보편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관행의 잔존, 사회전반의 운영시스템의 개선 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IT산업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자본기여율이 높으며,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도적인 응용기술 개발이나, 시장잠재력이 높은 비메모리 반도체, S/W,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는 역량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IT를 통해 국가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IT기반을 바탕으로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IT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확장을 넘어서는 2단계의 정보화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비전이 중요하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 과감하게 발걸음을 옮길 때이다.

2. 그동안의 추진실적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목표 아래 우리나라는 그 어느 국가보다 강력하게 국가차원의 정보화를 추진해 왔다.

1980년대 통신인프라의 현대화 및 국가기간업무 전산화 등의 초기 정보화를 시작으로 1990년대에는 전 세계적인 정보화 물결에 동참하여 미래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보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원활한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해 정보화 추진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국가정보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법제도의 보완, 국가정보화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차원의 기반을 확고히 했다.

우리 정부는 정보사회로의 세계적인 진화과정에 적응하려는 소극적인 측면의 정보화가 아니라 정보화를 우리 국가 발전 및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차원의 정보화 추진의 노력이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원동력이 되었으며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고 있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2002년 현재 IT산업의 GDP 비중은 약 14.9%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IT 수출은 총 수출의 28.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IT기기산업은 세계IT기기생산의 6.4%를 차지,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D램 반도체, LCD 등 일부 품목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IT산업의 발전은 1980년대 이래 통신부문의 투자 확대를 통해 그 토대가 조성되었다. 1980년대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심화되기 시작한 전화수요의 적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통신시설의 대량 확충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걸쳐 통신부문의 매출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통신시설 확충과 현대화에 투자하였는데 이는 타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엄청난 수준의 과감한 투자였다. 이러한 투자는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지식형태 네트워크사회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구축된 전국적인 자동전화망과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통해 조성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정보통신국가로 도약하기까지에 이르렀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는 정보화를 통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생산성 향상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정보화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정보화에 대한 종합비전이라 할 수 있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 등을 통해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추진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선도적인 이용자로

<한국의 정보화 현황>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초고속인터넷 가입가구 (만가구)	-	1.4	37.4	40.1	781	1,040
인터넷 이용자수(만명)	163	310	1,080	1,904	2,438	2,627
이용률(%)	-	-	-	44.7	56.6	59.4
인터넷 이용시간(주)	-	-	-	11.7h	12.1h	13.5h
PC보급대수 (만대)	693	827	1,153	1,862	2,150	2,249
무선인터넷 가입자수(만명)	-	-	-	1,578	2,387	2,908
이동전화 가입자(만명)	691	1,398	2,344	2,681	2,904	3,234
IT산업의 GDP비중(%)	8.6	9.3	11.2	13.1	12.9	14.9

자료: 정보통신부, 21세기 지식정보강국을 향하여, 2003.2

서 초기 정보화수요를 창출하여 민간투자 유발을 도모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정보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보접근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정보화를 통한 실질적인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의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에 비해서도 뒤쳐지는 15위를 기록하여 아시아 지역 내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한국은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달성한 이후 8년 동안 소득 1만불의 늪에 빠져있는 상황이며, 기존산업의 경쟁력 하락 및 중국의 부상 등으로 인해 새로운 돌파구 모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보화를 통한 새로운

비전 설정 및 전략 제시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한국 정보화의 위상>

- 국가정보화수준 18위/55개국 IDC/ Worldtimes 2001
- Networked Readiness Index (NRI) 20위/75개국 하버드 국제개발센터 2001-2002
- 전자정부 구현수준 평가 15위/190개국 UN 2002
- 전자정부 웹사이트 수준평가 2위/198개국 브라운대학 2001
- 전자정부활용도 수준 19위/30개국 TNS 2002
- 디지털 접근지수(DAI) 4위/178, 국제전기통신연합회(ITU), 2003
- OECD 내 IT산업 경쟁력 6위, OECD, 2002

3. 2003년도 정보화 추진 성과

2003년도는 새로운 전자정부 사업 및 공공정보화 로드맵을 마련한 중요한 한해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완료된 '국민의 정부' 11대 전자정부 사업에 이어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과 31대 과제를 확정지었으며, 국가정보화 5개년 계획인 'e-Korea Vision 2006'의 수정작업까지 추진하여 '참여정부' 신 국가정보화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IT산업에 있어서 2003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금융권과 통신사업자들의 투자억은 물론 일반인들의 소비심리마저도 얼어붙으면서, IT업체의 체감경기는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통신시장 역시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아 가입자 시장의 정체로 새로운 탈출기를 모색한 한해였다. 단순한 통신 서비스를 넘어서, 2.3GHz 대역의 휴대인터넷과 휴대형 단말기로

이동 중에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위성 DMB, 유무선 결합 서비스 등 다양한 각도에서 침체 탈출 및 신시장 창출 노력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경기침체 아래, 향후 우리나라의 향후 5~10년간 우리 경제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발굴해야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 200명이 참여하여 IT분야를 중심으로 한 10대 국가적 미래전략 산업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통신·방송·인터넷의 대통합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QoS, IPv6 등 고품질 인프라 기능이 지원되는 광대역통합망을 조기 구축하기 위한 'BcN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중추적 기반으로서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을 전략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25 인터넷 대란 이후, 해킹·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과 사이버 범죄, 개인 정보의 오·남용, 불법 음란물 유통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됨에 따라 안전한 디지털 사회

<2003년도 정보화동향>

구분	국내동향	해외동향
전자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11 전자정부 기반완성을 통해 전자정부 신속단계에 진입 · '03.8. 전자정부 로드맵 발표를 통해 2단계 전자정부 본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03.4. e-Government 25핵심과제 점검 및 향후 계획 발표 · 일본: '03~'05년까지 추진할 3개년 전자정부 구축계획 발표
신성장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8. 소득2만불 시대 원동력 발굴을 위한 '9대 IT신성장동력' 발전전략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03.3. 'Connected Singapore' 5대 육성분야 발표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 11. 차세대이동통신망 BcN 기본계획 발표 · '03.8. 중장기정보보호 기본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02.6.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미래상 발표(총무성) · 유럽: '03. '유럽네트워크 및 보안국' 설립
디지털 라이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 e-러닝 산업 활성화방안 발표 (산자부) · '03.12.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e-Life 부분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e-Europe 프로젝트로 Learning Initiative 채택 · 싱가포르:'03.1. 스마트홈 시범 프로젝트 착수 · 독일: 온라인 예방보조운동처방 e-Sport 프로젝트 추진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도 지난 8월 발표되었다.

국내 해킹 건수는 2003년 9월 현재 이미 전년 15,192건을 30% 이상을 넘고 있으며, 바이러스 피해건수도 작년대비 100%나 증가하였다. 개인 정보침해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간의 증가율을 고려하면 2007년에는 연 120,0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듯 2003년 한해는 정보화를 통한 기대와 역기능이 함께 부각된 한해였다. 국민들이 정보화를 통해 우리의 미래의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정보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심각성도 부각되었다.

빛과 그림자는 항상 함께 존재하듯이, 우리가 정보화를 통해 거는 기대가 클수록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역효과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2004년도 정보화 추진방향

2004년도 정보화 정책방향은 크게 4가지-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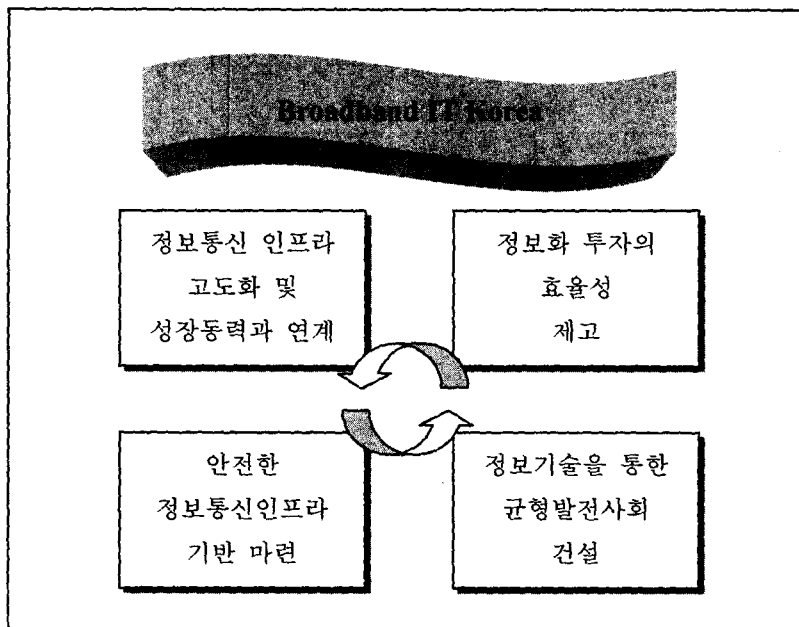
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성장동력과의 연계, 정보화 투자의 효율성 제고, 안전한 정보통신 인프라 마련, 정보기술을 통한 균형발전 사회 건설-로 구분할 수 있겠다.

우선 통신인프라 정책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는 한국 실정에 맞는 ADSL 방식을 채택하여 세계 최초로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초고속통신망은 가입자망 속도 향상 위주로 구축되어, 디지털 융합 및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비한 차세대 정보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품질보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광대역통합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0년까지 2,000만 유·무선 가입자에게 현재(1.5~2Mbps)보다 50배 이상 빠른 50~100Mbps급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품질보장(QoS), 보안, IPv6 등이 지원되



는 전달망 고도화를 추진하고, 가입자망에 있어서도 광케이블 구내통신망 구축공법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광대역화를 추진해 나아가야 하겠다.

또한 기존 기술과 차별되는 획기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첨단 연구개발망을 구축·운영하고, 융합서비스 보급 및 촉진을 위해 역무제도, 결합판매(bundling), 통신요금 등 통신사업 규제 제도 및 통신방송 융합 관련 법제도 등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특히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인터넷 주소자원의 고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보화 사회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는 IPv6의 확산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주소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의 정립, IPv6의 관련 핵심장비에 대한 연구 개발 등 IPv6의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광대역통합망 등 차세대 정보통신인프라는 단순히 인프라로서의 역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5~1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신성장동력과 원활히 연계되어 발전해 나아가야만 그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의 IT투자가 생산성 및 효율성과는 무관하게 양적인 팽창만을 거듭해 왔다는 지적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인프라와 신성장동력간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업체들이 세계 홈네트워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내수시장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분야를 RFID 등 IT신기술의 Test Bed로 활용하여 IT 신기술 시장의 수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두 번째로 정보화 투자에 관해서는, 선진국을 비롯하여 투자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는 만큼, 투자의 내실화가 중요하다.

2003년 UN이 회원국들의 전자정부 수준을 비교·평가한 세계 공공부문 보고서(UN World Public Sector Report 2003: e-Government at the Crossroads)에 따르면 선진국 및 개도국을 막론하고 “온라인 정부”의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정보화 투자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양적으로는 개별 경제주체의 정보기술 도입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중복투자, 투자와 성과간의 연계문제, 정보시스템간 상호운영성 문제 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정보화 정책방향은, 정보기술아키텍처(ITA) 도입, 웹 기반 시스템 연계 등 새로운 IT기술발전 추세를 반영, 정부·기업의 정보화 기반을 효율적으로 재구축하여 유휴 IT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겠다.

특히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투자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많은 나라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정부 사업 등 공공부문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민간기업까지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겠다.

또한 웹서비스 도입, 연계기술 개발 등을 통해 ‘통합과 연계’ 중심의 정보화 환경을 구현하는데 주력하고, 정보화평가 및 감리 등의 활성화를 통해 정보화 사업의 내실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지난 1.25사태 이후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된 사이버 안전체계 문제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3년 말 정보보호진흥원에 구축된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는 이 분야에서의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국가·사회의 IT인프라 의존도가 심화되고, 사이버 공격의 네트워크화 글로벌화 등으로 인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진 만큼 사이버 안전체계의 전방위적 강화가 필요하다.

우선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IT인프라 등 민간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해야 하며, 전자거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전자서명 이용환경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기술발달에 대응한 차세대 전자거래 보호기반을 조성해야 하겠다.

또한 사이버 안전 분야 기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정보보호 분야 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아가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도,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정비를 추진하고, 개인정보 활용의 전 과정에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침해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음란물 등 불건전정보의 유통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보통신 사업자의 책임확보 및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고, 불건전 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해 나아가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국민모두가 정보화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생산적 정보복지 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국민 정보화교육을 통해 전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인터넷 이용율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지역간 정보격차가 상존하고 있으며, 정보화와 IT기술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단순한 정보격차 해소보다는 모든 국민이 정보화를 통한 기회실현(Digital Opportunit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정보화 정책 방향은 단순한 교육 및 인프라의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겠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e-Life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그 우선순위가 낮았지만,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정보화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비쿼터스 사회가 도래되면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정보화가 침투되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향후 정보화 정책은 효율성, 활용성, 생산성 및 정보화를 통한 가치창출에 중점을 둔 정보화 정책과,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을 완화하는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 하락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2003년 상반기에는 IMF이후 처음으로 경기침체에 해당하는 2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 성장을 하였으며, 이러한 경기침체와 더불어 고용이 감소하고,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경제전반의 불안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국가적 돌파구'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그 돌파구는 IT에 있다고 확신한다.

세계 IT기술은 사회, 경제의 급속한 변화에 따

라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요구를 발 빠르게 충족 시키기 위해 지능화, 융·복합화, 광대역화 되어 가는 추세이다. 정보를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고 손쉽게 이용하고, 그 활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욕구증대가 이러한 변화 추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현실화 되면, 이를 기초로 하는 거대한 신규 시장이 태동될 전망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전추세와 기회를 정확히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경제가 발전해 나갈 원동력을 발굴해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이미 입증된 선진 국가들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따라가는 전략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정보화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향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도전을 거듭해 나아가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 모험과 위험이 큰 만큼 그 기회도 크다고 생각한다.

'디지털로 실현하는 풍요로운 선진국가'라는 비전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이러한 공감대 아래 IT를 새로운 재도약의 발판으로 한강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이룩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 삼 영

1972. 2.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정외과 부전공)
1975. 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
원 행정학석사
1987. 5. Wharton School,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영학박사
2003. 04 - 현재 정부혁신지

방분권위원회 위원 및 전자정부전문위원회간사
2003. 02 - 현재 UN IT Task Force 한국대표
2002. 06 - 현재 G7 국가 전자정부국제협력그룹
(GOL-IN) 의장
2001. 05 - 현재 한국전산원 원장
2001. 01 - 2003. 01 전자정부특위 위원 겸 실무단장
1999. 04 - 2001. 0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1998. 01 - 1999. 03 한국전산원 부원장, 정보화지원
단장
1996. 07 - 1997. 12 교육부 교육정보관리국장
1987. 12 - 1996. 07 한국전산원 초고속사업단장, 연
구위원, 기술지원본부장
1987. 09 - 1997. 06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
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강사
1981. 01 - 1984. 12 Busch Center 연구원
1975. 06 - 1978. 06 육군제3사관학교 교수

참고문헌

- [1] 전자정부백서, 전자정부특별위원회
- [2] 한국의 정보화전략, 2003. 정보통신부
- [3] IT신성장동력 발전전략, 2003. 정보통신부
- [4] BcN 기본계획, 2003. 정보통신부
- [5] 2004년도 업무계획, 2003. 정보통신부
- [6] 2003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전산원
- [7] e-Korea Vision 2006, 정보통신부